

# 현대차, 광주시-노동계 임금·근로시간 합의안 불만

## '광주형 일자리' 타결 지연 왜?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지역노동계(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지속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놓고 양측의 접점을 찾으려했던 광주시가 결국 지역노동계와 합의문을 작성할 것이 발단이 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투자 의향을 보인 현대차의 입장에서 지역노동계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역노동계가 노사민정협의회 이탈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나오자 원탁회의, 투자유치추진단 등을 함께 구성하면서 지역노동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했다.

현대차는 지역노동계의 주장이 실린 합의문으로는 노조의 반대, 내부 반발, 불확실성 등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 협상팀과 14일 만난 현대차는 아예 대화 자체도 하지 않으려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광주시와 지역노동계의 의견이 담겼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의견 대립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가 합의문 재작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최소한 합의문 내에서 각 조문의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만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 재작성은 또다른 파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광주시와 현대차가 각 조문에 세부사항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차, 광주시-지역노동계 합의문에 불만 제기=광주시와 현대차가 타결을 하지 못한 핵심 쟁점은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이다. 애초 현대차가 투자를 검토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원안은 주 44시간 근무시 근로자 초봉은 35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주 40시간 근무만 들어있는 뿐 임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용역을 통해 정해지는 입장이지만, 3500만원 수준을 상당부분 넘어설 것이라고 현대차는 예상하고 있다. 합의

시, 노동계 의견 상당부분 수렴 '발목'

노사 책임경영·원하청 개선도 이전

민주노총 강력 반발 속 접점 모색

문에는 당초 포함된 5년 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리지는 안도 없어졌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값 연봉'을 준다는 매력 사라진 것이다.

이 밖에도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시켜 사고하며, 적정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작동하게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 역시 현대차의 반발을 샀다.

'노사 책임경영' 역시 발목을 잡았다. 기업 경영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아직 56개 계열사 중 어디에서도 노동자 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오는 18일 1차 시한, 늦어도 이달 마지막주에는 결론 내야=광주시는 현대차와 계속 협상을 해가면서 의견 차를 줄여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합의문이 존재하는 한 이를 뛰어넘어 현대차를 끌어들이 유인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말에도 현대차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오는 18일까지 계속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애초 협상 종료 시점으로 10월 31일과 11월 9일을 제시했지만 모두 지키지 못했다. 다시 15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다만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르면 다음주중, 늦어도 이달 마지막주에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여지는 남아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는 이미 지난 12일 종료했지만,

각 중앙 부처의 동의를 받을 경우 예산소위원회 심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일단 현대차와 합의할 경우 중앙부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부처 모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 기아차 노조 강력 반발 등 협상 뒤 앞으려는 요소=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고용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 역시 타결 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경직된 임금구조,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의 만연, 사회적책임이 미흡하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원하청 간 극심한 일자리 격차의 발생,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점에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21일 민주노총이 탄력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대응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될 경우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가 타협 없이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노총이 중심인 지역노동계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노동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는 주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노동계가 현대차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고집할 경우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좋은 일자리를 반대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투쟁이 아니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강행은 기존 완성차 공장 지역과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펜스 미 부통령 악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북미 정상 합의 조속 이행 촉구 한·아세안 의장서명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은 15일(현지시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평양 공동선언 등 이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전날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항으로 구성된 의장서명을 채택했다.

이들 정상은 올해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이들 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과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이런 진전을 이룬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했다. 특히, 정상들은 이들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안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발사 자체 약속을 주목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한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

도 담았다.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역점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아세안 국방장관회의 등 다양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상품 협정상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이뤄지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을 평가하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호혜적인 RCEP의 내년 체결을 결의했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연합뉴스

#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등 24건 1548억원 지원 요청

광주시-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지난 10월 간담회 이어 두번째

광주시가 15일 오후 국회 인근 식당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0월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 관련 내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전정배, 박주선, 김동철, 장병안, 김경진, 권은희, 최경환, 송갑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시는 국비요청 사업 가운데 중점 확

보해야 하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건 617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과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건 163억원, 가상 교육·훈련 콘텐츠 활용 및 확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건 34억원 등을 건의했다.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국토교통부 4건 570억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등 환경노동부 소관 3건 84억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등 보건복지부 2건 50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 행정안전부 2건 30억원 등도 포함됐다. 모두 24건에 사업비는 1548억원이다.

특히 빛그린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 사업은 광주-전남 공동산단인 빛그린산단과 하남산단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빛그린산단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중인 타당성 재조사 통

과시 필요한 시설비 국비 81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국비 2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반영액보다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돕겠다"며 "광주시와 정치권이 상시 소통하고 협치하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초 국회에 제출된 광주시 2019년 국비 정부예산안은 전년도 정부예산안 대비 2346억원(13.2%) 증가된 2조149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정부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예결특위 및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 예상·50KW급 매월 150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 연금 발전소

##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 1899-8947

시흥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흥 | 기보종합건설